

KMI 동향분석

VOL.133
2019 AUGUST

발간년월 2019년 8월(통권 제133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최재선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내용은 발간예정인 '2019 해양수산업 분석 보고서-2015년 산업연관표 기준' 연구를 활용하였습니다.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재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 필요-

장정인 경제산업연구실장
(jeongin@kmi.re.kr/051-797-4717)
정수빈 경제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jsbeen@kmi.re.kr/051-797-4757)
김태진 경제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tjkim@kmi.re.kr/051-797-4762)
김성은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
(sekim@kmi.re.kr/051-797-4769)
이현동 경제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lhd7729@kmi.re.kr/051-797-4543)
고병욱 경제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valiance@kmi.re.kr/051-797-4632)

기존 표준산업분류체계로는 해양수산업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8년에 통계청 승인 하에 해양수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9개의 대분류산업이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로 구축되었다. 이에 KMI는 해양수산업 중심의 산업연관표(2010-2015년)를 새롭게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업의 규모와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수요유도형 모형 기반 외생화 기법을 적용해 해양수산업의 외생적 산출증가에 따른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5년 해양수산업의 산출로 인한 국민경제 직간접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생산유발효과는 274조 원(직접 148조 원, 간접 126조 원),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7.8조 원(직접 38.4조 원, 간접 49.4조 원), 총 취업유발효과는 137만 명(직접 59.6만 명, 간접 77.7만 명)으로, 부가가치와 취업부문에서 간접효과가 큰 경향을 보였다. 해양수산업의 총 생산유발효과는 농림축산부문(88조 원)의 3.1배에 해당하며, 전기 및 전자기기부문(504조 원)의 54.4%에 해당한다.

2015년 해양수산업 총산출액(직접)은 약 147.9조 원, 부가가치(직접)는 약 38.4조 원으로 추산된다. 해양수산업은 기존의 30개 전산업(대분류)과 비교했을 때 총산출 측면에서 9위,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15위에 해당되었다. 해양수산업의 총산출 규모는 1위 산업인 전기 및 전자기기(345.4조 원)의 42.8%, 건설(207.9조 원)의 71.2%, 자동차(190.1조 원)의 77.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농림축산(54조 원)의 약 2.7배에 해당한다. 부가가치 규모는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26%),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20%), 수산업(생산, 가공, 유통, 19.5%), 해운(18.1%), 항만(5.5%)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가가치측면에서 보면, 해양석유 및 가스채취업과 해양관광업이 주를 이루는 세계 해양수산업 구조와 달리,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업은 제조와 서비스 부문에 특화된 편이다.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 조선업을 제외할 경우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는 2010년 24.5조에서 2015년 30.7조로 연평균 4.7% 증가했으며, 취업자수도 2010년 43.2만 명에서 2015년 47.5만 명으로 연평균 1.9%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수산물 유통, 수산물 가공, 해양수산 레저·관광, 해양자원개발 및 건설 등의 서비스업 부문은 전산업 평균 부가가치 성장률(5.8%) 이상의 고성장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세계 해운 및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해양수산업 총 부가가치(직접)는 2010년-2015년 사이 42.4조 원에서 38.4조 원으로 감소했다. 해양수산업 내 비중이 큰 두 산업의 감소세가 해양수산업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해양수산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부가가치율과 취업계수가 높은 해양수산 성장 Key Sector인 수산물 유통업, 항만업,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동일 금액을 투자할 경우 부가가치 및 고용 측면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산업으로, 정책의 효과성이 높고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인 만큼 성장전략 마련이 시급한 부문이다.

둘째, 해양수산업 내 비중이 큰 해운·조선·항만, 수산 등 주요 산업의 양적 규모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수산업은 유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가공부문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하며, 해운·조선분야는 업계의 상생전략과 정부차원의 R&D지원, 금융·법률 등 연관 서비스업 연계와 같은 다양한 산업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해양수산 레저·관광 부문은 양적 비중은 작지만, 부가가치와 고용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부문이다. 향후 여가 트렌드와 해양레저 수요를 고려한 성장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비-공급 양측면의 활동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면밀한 산업규모 측정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율이 높아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부문이므로, 해양수산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부문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해양수산업 중심의 산업연관분석 시행

■ 최근 발표된 201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양수산업의 규모(산출, 부가가치, 고용)와 산업구조 및 파급효과를 분석, 과거 5개년도 추이와 비교

- 해양수산업의 위상과 구조를 진단하기 위해,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¹⁾에 분류된 10개 해양수산업과 30개 대분류 산업으로 구성된 해양수산업 중심의 산업연관표(40×40 투입산출표)를 새롭게 작성함²⁾
- 10개 해양수산업은 해양자원개발 및 건설, 해운, 항만,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이하 조선), 수산물 생산, 수산물 가공, 수산물 유통, 해양수산 레저·관광,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가 해당됨³⁾⁴⁾

표 1. 해양수산업 중심 산업연관표 대분류

코드	대분류 산업명	비고	코드	대분류 산업명	비고
1	농림축산품	농림축산·광업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서비스업
2	광산물		2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3	음식료품		2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4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24	부동산 및 임대	
5	목재 및 종이, 인쇄		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6	석탄 및 석유제품		26	사업지원서비스	
7	화학제품		27	공공행정 및 국방	
8	비금속광물제품		28	교육서비스	
9	1차 금속제품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0	금속제품		30	문화 및 기타 서비스	
11	기계 및 장비	전력·가스·수도·폐기물 처리업	31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해양수산업
12	전기 및 전자기기		32	해운	
13	정밀기기		33	항만	
14	운송장비		34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35	수산물 생산	
16	전력, 가스 및 증기		36	수산물 가공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37	수산물 유통	
18	건설	건설	38	해양수산 레저·관광	
19	도소매서비스	서비스업	39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20	운송서비스		40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 대분류를 기준으로 저자 작성

- 1) 2018년 통계청 승인 해양수산 특수분류는 총 9개 대분류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는 해운·항만업을 해운업과 항만업으로 구분하여 총 10개 산업으로 구분함
- 2) 한국은행이 공표한 2010~2015년 기초가격으로 평가된 투입산출표(국산거래표)를 사용하였음. 산업연관표 기본부문(384개)부문에서 10개 해양수산업을 식별하기 위해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연계표와 산업연관표 부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연계표를 활용하였음. 각 부문에서 해양수산업이 일부분만을 차지하는 경우, 해양수산업의 비중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연관표 부속표(부문별 품목별 공급액표),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경제총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기타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함
- 3)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에는 해양자원 생산, 공급 및 개발업, 해양바이오제품 제조업, 항만 및 해상교량 건설업, 해양수산물 렌트 및 구조물 공사업 등 4개 부문이 포함
- 4) 해양수산서비스업에는 해양폐기물 처리 및 정화복원업, 해양수산 기자재 도소매업, 해양수산 기자재 수리업, 해양수산업력 고용 알선 및 공급업, 해양수산업교육서비스업, 해양수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해양수산 금융 및 보험업, 해양수산 협회 및 단체, 수산물 요리 전문점 등 9개 부문이 포함

- 새롭게 작성한 해양수산업 중심 산업연관표를 대상으로 수요유도형 모형 기반 전후방연쇄효과를 분석하고, 외생화 기법을 적용하여 해양수산업의 외생적 산출증가에 따른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를 분석함

해양수산업의 역할과 위상

■ 2015년 해양수산업의 규모는 산출(직접) 147.9조 원, 부가가치(직접) 38.4조 원으로 추산

- 해양수산업은 기존의 30개 대분류 산업과 비교했을 때 총산출 측면에서 9위⁵⁾, 부가가치와 취업자수측면에서는 15위에 해당하며, 국내 총산출과 부가가치⁶⁾의 3.98%와 2.52%차지

※ 과거 유사연구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2017)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해양수산업의 GDP 총 효과는 6.4%였음. 이는 2018 해양수산업특수분류체계와 일부 상이한 분류를 적용했으며, 직접부가가치 규모(직접효과)와 산업파급효과(간접효과)를 합한 총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므로 해외연구 및 본 연구에서 직접 부가가치 규모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GVA 비중과 단순비교는 어려움

- 해양수산업은 총산출 측면에서(직접) 1위 산업인 전기 및 전자기기(345.4조 원)의 42.8%, 건설(207.9조 원)의 71.2%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자동차(190.1조 원)의 77.8%, 농림축산(54조 원)의 약 2.7배에 해당함
-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규모(직접)는 전기 및 전자기기(110.6조 원)의 38.4%, 건설(78.9조 원)의 49%, 자동차(35.0조 원)의 1.1배, 농림축산(30.3조 원)의 1.3배에 해당함
- 해양수산업의 전업환산기준 취업자수는 59.6만 명으로 추산되며, 전기 및 전자기기(62.9만 명)의 92.8%, 건설(158.4만 명)의 38%, 자동차(38.7만 명)의 1.6배, 농림축산(124.8만 명)의 47.8%에 해당함

표 2. 해양수산업의 총산출 · 부가가치 · 취업자 수(2015)

				단위: 조 원, 만 명
구분	해양수산업(A)	전산업(B)	비중(A/B)	해양수산업 순위
총산출	147.9	3,717.0	3.98%	9/31
부가가치	38.4	1,520.9	2.52%	15/31
취업자 수(만 명)	59.6	2,382.9	2.50%	15/31

자료: 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용, 해양수산업 중심으로 저자 분석

5) 1위부터 8위까지 산업은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도소매서비스, 건설, 운송장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순임. 농림축산품은 산출측면에서 26위, 부가가치 측면에서 22위에 해당함

6) GVA(gross value added)로, GDP(gross domestic product)에서 순생산물세(생산세-보조금)를 제외한 부가가치를 의미함

[산업연관표의 취업자수와 다른 고용통계와의 차이]

- 산업연관표의 취업자수는 전업환산기준(full-time equivalent)으로 측정한 단위를 사용함. 이는 임시 및 시간제 근로자가 전업 근로자의 노동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노동량이 과다 계측되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적용하는 노동량 계측 단위임. 예를 들어, 1년 동안 A는 하루 평균 8시간씩 근무하고, B는 하루 평균 4시간씩 일한 경우,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취업자 수는 2명이나 근로시간을 고려한 전업환산기준 취업자 수는 1.5명(전업 일평균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으로 측정됨. 따라서 통계청을 비롯한 여타 통계조사에서 측정되는 취업자 수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의 취업자 수는 서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산업연관표에서 추산한 해양수산업 취업자수는 해양수산업 관련 조사통계상의 종사자수 등과 차이가 날 수 있음. 해양수산업 관련 조사통계에서는 해양수산업을 중심으로 집계한 통계이므로, 해양수산품을 일부라도 생산하고 있다면 해양수산업으로 식별하여 해당 상품생산에 투입된 종사자수를 집계함. 반면, 산업연관표는 기본적으로 한 부문에서 동질적인 한 상품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므로, 전자와 같은 기업들의 산출 및 종사자수는 제외될 수 있음. 일부 해양수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양수산품과 타생산품을 동시에 생산하므로, 조사통계의 종사자수가 더 큰 값을 갖게 됨. 따라서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한 해양수산업을 분석한 결과는 고용의 절대적인 규모 측면보다는 취업계수나 파급효과에 더 중점을 두어 활용 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출 측면에서는 조선(40.3%)과 해운(22.2%) 부문이,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측면에서는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부가가치 26%, 취업자 28%)와 조선(20%)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함

표 3. 해양수산 부문별 총산출 · 부가가치 · 취업자 수(2015)

단위: 조 원, 만 명

부문	총산출	비중	부가가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수산물 생산	7.4	5.0%	2.9	7.6%	5.1	8.6%
수산물 가공	9.7	6.5%	1.6	4.1%	4.4	7.4%
수산물 유통	5.7	3.8%	3.0	7.8%	8.0	13.4%
해운	32.9	22.2%	6.9	18.1%	5.6	9.4%
항만	4.4	3.0%	2.1	5.5%	2.9	4.9%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59.7	40.3%	7.7	20.0%	12.1	20.3%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5.9	4.0%	1.6	4.3%	1.7	2.8%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4.6	3.1%	2.0	5.2%	2.0	3.3%
해양수산 레저관광	1.1	0.8%	0.5	1.4%	1.0	1.6%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16.6	11.2%	10.0	26.0%	16.8	28.2%
계	147.9	100.0%	38.4	100.0%	59.6	100.0%

자료: 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용, 해양수산업 중심으로 저자 분석

■ 해양수산업의 총 생산유발효과는 274조 원(직접 148조, 간접 126조),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7.8조 원(직접 38.4조, 간접 49.4조)

- 총 취업유발효과는 137.3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해양수산 부문의 취업자수 59.6만 명과 해양수산부문 생산활동으로 인한 타 산업 부문의 간접적 취업유발 효과 77.7만 명으로 구분됨

- 해양수산업의 직접적 산출·부가가치·고용(직접효과)과 이것이 전산업에 유발하는 파급효과(간접효과)를 합한 총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와 취업측면에서 간접효과가 직접효과 보다 더 큰 경향을 보임
- 해양수산업의 총 생산유발효과는 농림축산부문(88조 원)의 3.1배에 해당하며, 30개 대분류 산업 중 총산출 1위 산업인 전기 및 전자기기부문(504조 원)의 54.4%에 해당함
- 해양수산업의 총 부가가치유발효과(87.8조 원)는 농림축산업(41.7조 원)의 2.1배, 전기 및 전자기기(172조 원)의 51.0%에 해당함
- 또한 해양수산업의 총 취업유발효과(137.3만 명)는 농림축산업(142.8만 명)의 96.2%, 전기 및 전자기기(77.4만 명)의 1.8배에 해당함

표 4. 해양수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2015년)

부문	직접효과(A)	간접효과(B)	총효과(A+B)
생산유발효과(억 원)	1,479,068	1,262,395	2,741,463
부가가치유발효과(억 원)	383,902	493,633	877,535
취업유발효과(명)	595,868	777,227	1,373,095

자료: 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용, 해양수산업 중심으로 저자 분석

해양수산업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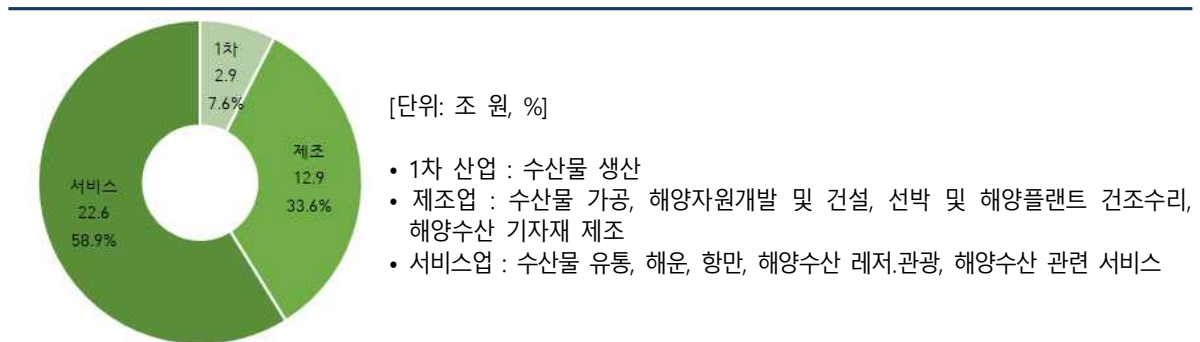
■ 해양석유 및 가스채취업과 해양관광업이 주를 이루는 세계 해양수산업 구조와 달리,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업은 제조와 서비스 부문에 특화

- OECD(2016)에 따르면, 세계해양산업 부가가치는 약 1.5조 달러(2010년 기준)이며, 주로 자원을 활용하는 해양 석유·가스 채굴업(34%)과 해양관광업(26%)이 60%를 차지함⁷⁾
- 단 해양수산 레저·관광업의 경우 국내 분류와 달리 음식 및 숙박업을 포함함
- 해양국들의 주요 해양수산업(부가가치 비중 기준)은 해양석유가스 채굴업과 해양레저·관광업이 1-2위를 차지해 주로 해양 광물, 지형·자연경관 등의 자원에 의존적인 특징을 보임⁸⁾
- 우리나라는 선박제조와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어 해양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서비스와 제조 기술 분야가 특화된 편임

7) OECD, 「Ocean Economy in 2030」, 2016.

8) 세계 주요 해양국들의 해양수산업 총부가가치의 국가 GDP(또는 GVA) 비중은, 중국(9.4%)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0.9%~5% 수준임

그림 1. 우리나라 해양수산업 부가가치 구조



자료: 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용, 해양수산업 중심으로 저자 분석

표 5. 주요국 및 한국의 해양수산업 부가가치 규모

구분	미국	중국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뉴질랜드	호주	한국
해양경제규모 (GDP 비중)	2015 3,201억 달러 (1.8%)	2017 7.7조 위안 (9.4%)	2012 385억 파운드 (4%)	2016 57억 유로 (0.9%)	2011 300억 유로 (1.2%)	2013 47억 유로 (3.1%)	2013 40억 달러 (1.9%)	2013-14 730억 달러 (5.0%)	2015 339.3억 달러 (2.5%)
1위산업 (해양수산업 내 비중)	해양레저 관광 (36.1%)	해양 관광 (17.1%)	석유·가스 (51.1%)	해운 물류 (29.7%)	해안 관광 (48.3%)	해양 관광 (35.5%)	해양광물 자원 (48.3%)	석유·가스 (41.4%)	해양수산업 연서비스 (26.0%)
2위산업 (해양수산업 내 비중)	석유·가스·모 래저길채취 (33.4%)	해양교통 운송 (8.5%)	해상 운송 (18.2%)	해양관광레저 (27.3%)	석유·가스·서 비스 (14.2%)	수산업 (25.7%)	해운 (24.2%)	해양레저·관 광 (38.4%)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20.0%)

* 한국은행 원화의 대미달러(시가) 2015년 평균(1131.46달러) 활용하여 환산, 해외사례의 경우, 해양레저·관광업에 음식 및 숙박업 포함

자료: 장정인 외, 「2018 해양수산업 분석 보고서-2014년 산업연관표 기준」, 2019. p.68을 토대로 재작성

■ 조선업의 경기하강으로 2015년 해양수산업 규모는 2010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조선업을 제외하면 총산출, 부가가치, 고용은 각각 연평균 1.1%, 4.7%, 1.9% 성장

- 해양수산업 총산출은 2010년 150.0조 원에서 2015년 147.9조 원으로 감소했고 부가가치도 2010년 42.4조 원에서 2015년 38.4조 원으로 감소함
- 해양수산업의 감소세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업의 침체에 기인함. 실제로 2010년 17.9조 원이던 조선업 부가가치가 2014년 12조, 2015년에는 7.7조로 큰 폭으로 감소했음
- 조선부문을 제외할 경우 해양수산업의 총 산출은 2010년 83.5조에서 2015년 88.2조로 연평균 1.1% 증가했고, 부가가치는 2010년 24.5조에서 2015년 30.7조로 연평균 4.7% 증가, 취업자수도 2010년 43.2만 명에서 2015년 47.5만 명으로 연평균 1.9%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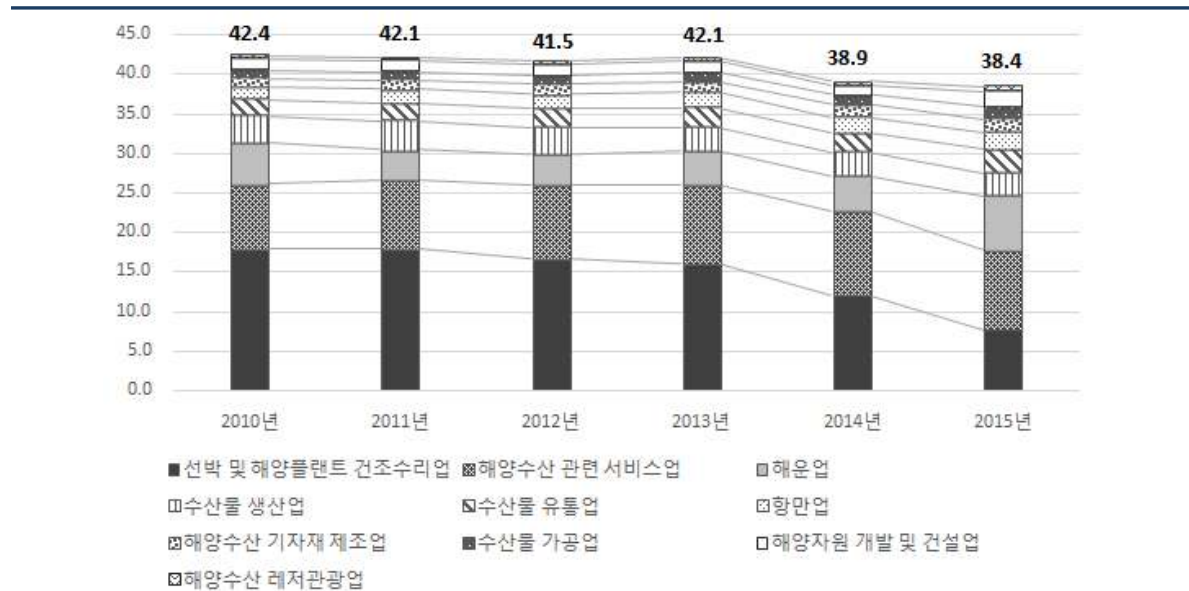
표 6. 해양수산업의 총산출 · 부가가치 · 취업자 수의 규모 변화

단위: 조 원, 만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산출	해양수산업(A)	150.0	154.6	156.4	145.2	147.0	147.9
	전산업(B)	3,144.4	3,483.9	3,579.8	3,599.4	3,658.0	3,717.0
	비중(A/B)	4.77%	4.44%	4.37%	4.03%	4.02%	3.98%
부가가치	해양수산업(A)	42.4	42.1	41.5	42.1	38.9	38.4
	전산업(B)	1,145.1	1,210.0	1,251.5	1,303.2	1,354.9	1,520.9
	비중(A/B)	3.70%	3.48%	3.32%	3.23%	2.87%	2.52%
취업자 수	해양수산업(A)	55.3	56.7	57.7	59.2	59.6	59.6
	전산업(B)	2,142.2	2,223.1	2,299.1	2,317.1	2,356.8	2,382.9
	비중(A/B)	2.58%	2.55%	2.51%	2.56%	2.53%	2.50%
조선업 제외	총산출	83.5	80.8	84.7	81.1	82.8	88.2
	부가가치	24.5	24.2	25.0	26.2	26.9	30.7
	취업자수	43.2	43.6	45.8	46.6	46.5	47.5

자료: 2010-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용, 해양수산업 중심으로 저자 분석

그림 2. 해양수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추이(2010~2015)



자료: 2010-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용, 해양수산업 중심으로 저자 분석

해양수산 부문별 성장추이

■ 수산물 유통업은 산출부가가치취업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은 부문

- 2010~2015년 동안 수산물 유통업(8.0%),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5.8%),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5.7%),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4.8%), 해양수산 레저관광업(4.7%) 순으로 총산출 연평균성장률이 높았음
- 부가가치 연평균성장률은 수산물 유통업(8.9%), 수산물 가공업(8.6%), 해양수산 레저관광(8.0%),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7.2%),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6.4%) 순으로 높았음
- 취업자수 연평균성장률은 수산물 유통업(5.6%),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5.6%), 항만업(4.4%)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7. 해양수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추이(2010~2015)

단위: 조 원

부문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AGR
수산물 생산	3.5	3.8	3.5	3.1	3.1	2.9	-3.5%
수산물 가공	1.0	1.1	1.1	1.2	1.3	1.6	8.6%
수산물 유통	2.0	2.1	2.3	2.4	2.3	3.0	8.9%
해운	5.4	3.7	4.0	4.3	4.6	6.9	5.4%
항만	1.6	1.7	1.7	1.9	2.0	2.1	6.2%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17.9	17.9	16.6	15.9	12.0	7.7	-15.6%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1.2	1.3	1.4	1.4	1.4	1.6	7.2%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1.5	1.5	1.4	1.5	1.2	2.0	6.4%
해양수산 레저관광	0.4	0.3	0.4	0.4	0.4	0.5	8.0%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8.1	8.7	9.3	10.0	10.5	10.0	4.4%
계	42.4	42.1	41.5	42.1	38.9	38.4	-1.9%

자료: 2010~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용, 해양수산업 중심으로 저자 분석

그림 3. 해양수산업 부문별 부가가치의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2010~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용, 해양수산업 중심으로 저자 분석

표 8. 해양수산업 부문별 연평균 성장률과 성장 그룹 분류(2010-2015)

부문	총산출		부가가치		취업자 수	
	CAGR	그룹 분류	CAGR	그룹 분류	CAGR	그룹 분류
수산물 생산	-0.4%	↓	-3.5%	↓	-1.9%	↓
수산물 가공	3.7%	↑	8.6%	↑	2.4%	↑
수산물 유통	8.0%	↑	8.9%	↑	5.6%	↑
해운	-3.0%	↓	5.4%	↑	-1.2%	↓
항만	2.0%	↑	6.2%	↑	4.4%	↑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2.1%	↓	-15.6%	↓	0.1%	↑
해양수산업 기자재 제조	5.7%	↑	7.2%	↑	1.1%	↑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4.8%	↑	6.4%	↑	5.6%	↑
해양수산업 레저관광	-1.8%	↓	8.0%	↑	-0.0%	↓
해양수산업 관련 서비스	6.1%	↑	4.4%	↑	2.1%	↑
해양수산업 전체	-0.3%	-	-1.9%	-	1.5%	-
전산업	3.4%	-	5.8%	-	2.2%	-

주: ↑는 고성장 추세 그룹(전산업 CAGR보다 높은 산업), ↓는 성장 추세 그룹(전산업 CAGR보다 낮지만 양(+)인 산업),
 ↓는 하락 추세 그룹(CAGR이 음(-)인 산업)

자료: 2010-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용, 해양수산업 중심으로 저자 분석

■ 2010-2015년의 연평균성장률을 전산업과 비교한 결과, 8개 해양수산업부문이 양(+)의 성장추세를 보임

- 수산물 유통, 해양자원개발 및 건설은 산출·부가가치·취업자 수 모든 측면에서 전산업 성장률 이상의 고성장 추세를 보임
- 부가가치 측면에서 고성장 추세를 보인 부문은 수산물 유통, 수산물 가공, 해양수산업 레저·관광 등임

■ 세계 해운 및 조선경기 침체로 조선부문 산출·부가가치 감소추세 지속, 국내 해양수산업 변동성 증가

- 해운업과 조선업의 총산출 연평균성장률은 각각 -3.0%, -2.1%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첨부 부표1 참고)
- 조선업은 2014-2015년 사이 10개 해양수산업 부문 중 가장 큰 감소를 보인 부문이었는데, 조선업의 총산출은 4.6조 원 감소, 부가가치는 4.4조 원 감소, 취업자 수는 1.1만 명 감소했음

- 같은 기간 조선부문의 부가가치가 감소한 배경은 피용자보수가 3.3조 원, 영업잉여가 1.3조 원 감소했기 때문임.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유가가 안정되자 해양플랜트 수요 감소로 2013년 이후 국내 조선업체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함
- 해운업은 2014~2015년 사이, 컨테이너선, 건화물선 운임이 부진했으나 대형 원유운반선(VLCC) 운임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함
- 해운업과 조선업의 경우 대외 경기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에 해당됨. 대외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해운업과 조선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전체 총산출 규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표 9. 조선·해운 부가가치 항목별 추이(2010~2015)

단위: 조 원

부문	부가가치 하위항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선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피용자보수	7.6	8.0	8.5	8.5	8.7	5.4
	영업잉여	6.1	5.7	3.6	3.0	-1.2	-2.5
	고정자본 소모	4.0	4.1	4.3	4.3	4.5	4.6
	순생산세	0.1	0.1	0.1	0.1	0.1	0.1
	부가가치 계	17.9	17.9	16.6	15.9	12.0	7.7
	총산출	66.5	73.9	71.7	64.1	64.2	59.7
해운	피용자보수	1.9	2.0	2.0	2.1	2.1	2.5
	영업잉여	1.1	-0.4	-0.4	-0.3	-0.3	1.8
	고정자본 소모	2.3	2.0	2.3	2.4	2.6	2.5
	순생산세	0.1	0.1	0.1	0.1	0.1	0.1
	부가가치 계	5.4	3.7	4.0	4.3	4.6	6.9
	총산출	38.3	32.5	35.0	30.4	30.5	32.9

자료: 2010~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용, 해양수산업 중심으로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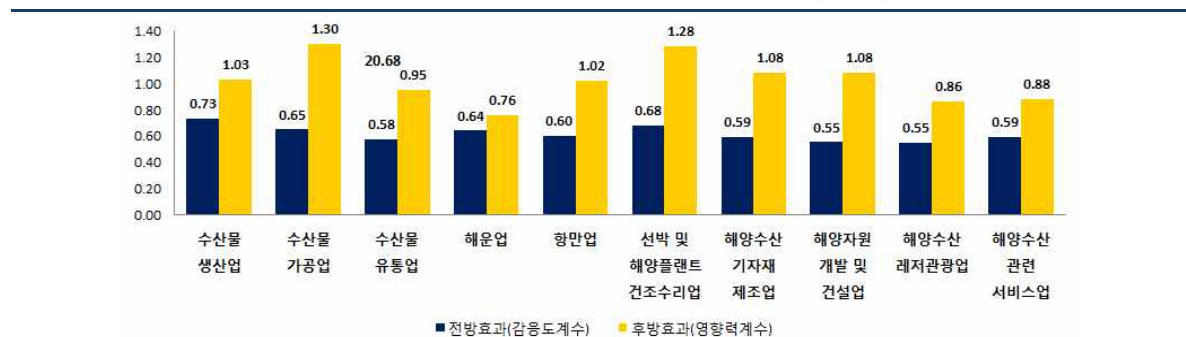
해양수산 부문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 해양수산 부문들은 전방효과가 낮고 후방효과가 높아 주로 다른 산업의 중간재를 활용하여 생산되는 최종재 유형⁹⁾

- 수산물 가공, 조선, 해양수산 기자재, 해양자원개발 및 건설, 수산물 생산 부문은 후방연쇄효과가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수산물 생산부문은 각종 가공식품 및 기타 재화에 활용되는 농림축산품 생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전방효과가 낮은 편이었음¹⁰⁾

9) 후방효과(영향력계수)와 전방효과(감응도계수)는 전산업 평균을 1로 환산한 값임

그림 4. 해양수산업 부문별 전후방연쇄효과(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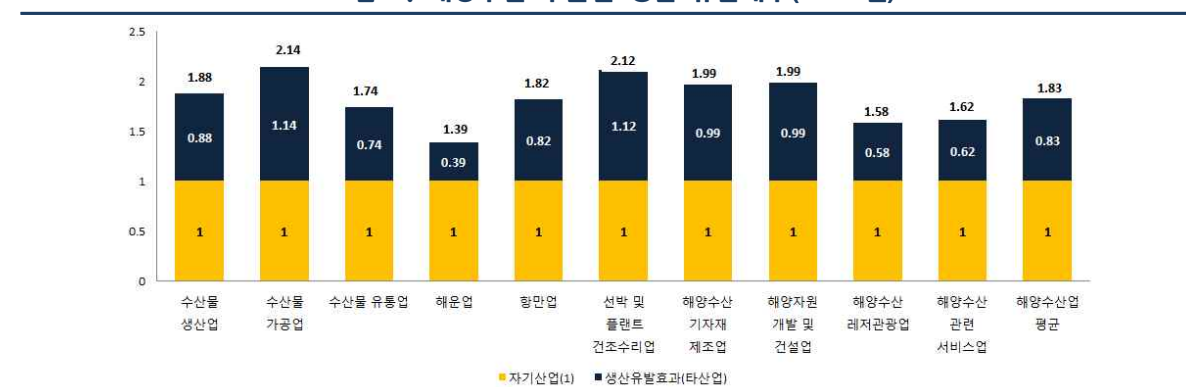


자료: 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용, 해양수산업 중심으로 저자 분석

■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는 수산물가공, 해양수산 기자재 등의 제조분야와 해양자원개발 등의 신산업 분야가, 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는 수산물 유통,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등의 서비스 분야가 강세

- 산출 1원 증가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수산물 가공(2.14)이며, 그 다음으로 조선(2.12),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1.99), 해양자원개발 및 건설 부문(1.99) 순임¹¹⁾

그림 5. 해양수산업 부문별 생산 유발계수(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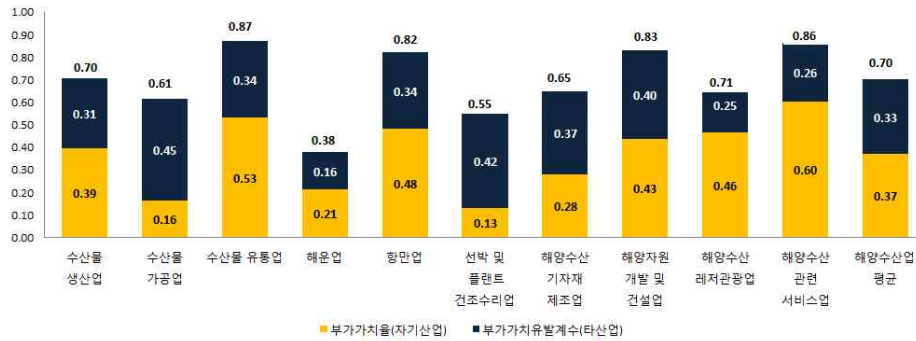
자료 : 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용, 해양수산업 중심으로 저자 분석

- 총부가가치 유발계수 면에서는, 수산물 유통(0.87),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0.86), 해양자원개발 및 건설(0.83), 항만(0.82) 순으로 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났음

10) 수산물 생산업의 전방연쇄효과는 1.3511, 농림축산품 생산업의 전방연쇄효과는 1.9829 였음 (생산유발계수 행합 기준)

11) 외생화 모형의 생산유발효과가 2보다 큰 값을 가질 경우 간접효과(타산업)가 직접효과(자기산업)보다 큼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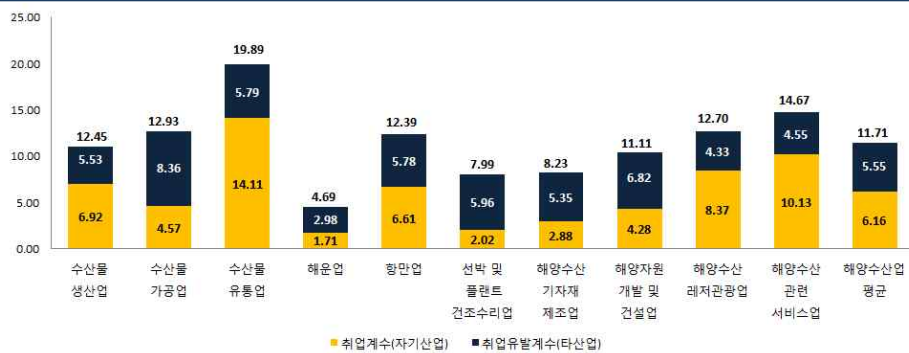
그림 6. 해양수산 부문별 부가가치 유발계수(2015년)



자료 : 저자 작성

- 총취업유발 계수는 수산물 유통(10억원당 19.9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14.7명), 수산물 가공업(12.9명), 해양수산 레저관광업(12.7명), 수산물 생산업(12.5명), 항만(12.4명) 순으로 높았음

그림 7. 해양수산 부문별 취업 유발계수(2015년)



자료 : 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용, 해양수산업 중심으로 저자 분석

해양수산업의 성장잠재력

■ 해양수산업의 비중이 큰 '주요산업'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Key Sector'에 주목

- 부가가치와 취업자수의 규모가 큰 수산업, 해운·항만, 조선업 등은 해양수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으로 현재의 해양수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산업'임
- 취업계수와 부가가치율이 높은 해양수산 부문들은 동일 금액을 투자할 경우에 고용창출효과와 고 부가가치산업으로 해양수산업 향후 성장을 위한 'Key Sector'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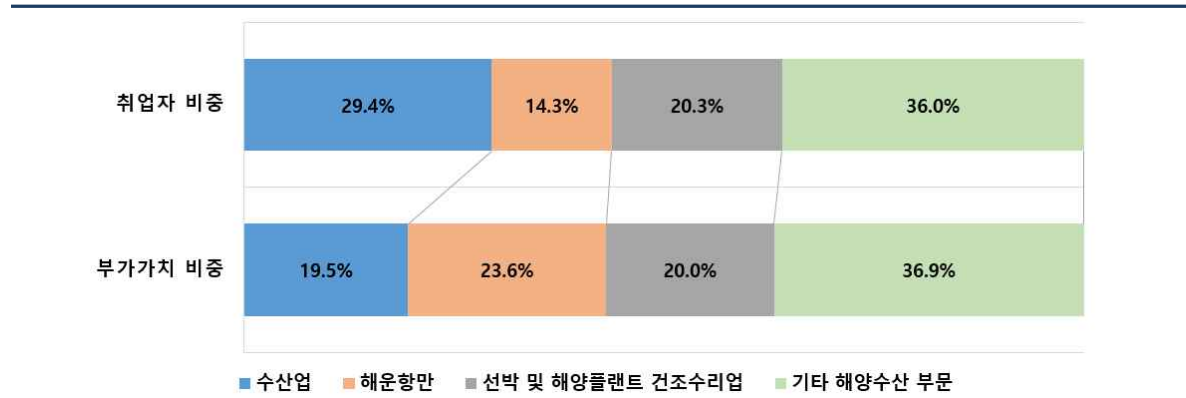
■ 수산업, 해운·항만, 조선업 등 경제 규모가 큰 주요산업의 내실화에 주력할 필요

- 2015년 기준 해양수산업 내에서 수산업의 취업자 및 부가가치 비중은 각각 29.4%, 19.5%에

이르며, 해운항만과 조선업의 취업자 및 부가가치 비중은 각각 34.6%, 43.6%에 달함

- 이들은 큰 비중을 차지함은 물론, 해양수산업 부문 내에서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해양수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임. 해양수산 경제활동 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요산업의 위상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내실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그림 8. 주요산업의 취업자 및 부가가치 비중(2015년)



자료 : 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용, 해양수산업 중심으로 저자 분석

■ 수산물 유통, 항만, 해양수산 레저관광,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등 4대 Key Sector들은 투자시 고용창출효과가 큰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

- 2015년 기준 부가가치율과 취업계수를 전 산업과 비교한 결과, 수산물 유통, 항만, 해양수산 레저관광,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등 4개 부문은 동일 금액을 투자할 경우 타 산업 보다 부가가치 및 고용 측면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정책의 효과성이 높고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임
 -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수산물 유통, 항만, 해양수산 레저관광,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은 전 산업보다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임
 - 수산물 유통,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해양수산 레저관광, 수산물 생산, 항만업은 전 산업보다 취업계수가 높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임
- 현재 주요산업이면서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부문인 수산물 유통업, 항만업의 경우, 현재 산업 규모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주요산업은 아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수산 레저관광, 해양수산 관련서비스의 경우 정부 지원 및 투자확대에 따른 정책효과성이 큰 산업으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임
 -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 중 최근 정책적 수요가 큰 부문은 해양수산교육서비스업, 해양수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해양수산 금융 및 보험업 등임

그림 9. 정책 효과성 측면의 해양수산업 특성 분류



주: 1. 2015년 취업계수 및 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고용창출 그룹은 전산업 취업계수(10억 원 당 6.4명)보다 높은 부문, 고부가가치 그룹은 전산업 부가가치율(40.9%)보다 높은 부문임
 2. 세부 산업 중에 취업자수 및 부가가치가 큰 주요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은 하늘색 박스로 표시
 자료: 2010-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용, 해양수산업 중심으로 저자 분석

표 10. 해양수산업 부문별 부가가치율 추이(2010~2015)

단위: %, %p

부문	2010년(A)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B)	B-A
수산물 생산	46.0	46.1	44.4	42.4	40.9	39.2	-6.8
수산물 가공	12.9	12.8	12.7	13.9	13.9	16.2	3.3
수산물 유통	50.9	50.7	50.2	50.3	49.3	52.9	2.0
해운	14.0	11.5	11.3	14.1	15.0	21.1	7.2
항만	39.2	39.2	40.1	40.2	39.9	48.0	8.8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26.9	24.2	23.1	24.8	18.8	12.9	-14.0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26.0	25.4	25.9	26.7	26.7	28.0	1.9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40.3	40.5	42.3	45.0	46.9	43.4	3.2
해양수산 레저관광	28.9	29.9	29.5	33.0	33.3	46.5	17.6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65.3	64.5	64.7	65.3	64.1	60.3	-5.1
해양수산 전체	28.2	27.2	26.6	29.0	26.5	26.0	-2.2
전산업	36.4	34.7	35.0	36.2	37.0	40.9	4.5

자료: 2010-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용, 해양수산업 중심으로 저자 분석

표 11. 해양수산업 부문별 취업계수 추이(2010~2015)

단위: 명/10억 원

부문	2010년(A)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B)	B-A
수산물 생산	7.5	6.0	6.3	6.4	5.9	6.9	-0.6
수산물 가공	4.9	4.5	4.4	4.4	4.3	4.6	-0.3
수산물 유통	15.8	14.9	14.3	13.7	14.0	14.1	-1.7
해운	1.6	1.8	2.0	2.4	2.3	1.7	0.2
항만	5.9	5.6	5.7	6.0	5.5	6.6	0.7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1.8	1.8	1.7	2.0	2.0	2.0	0.2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3.6	3.4	3.2	3.4	3.5	2.9	-0.7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4.1	5.2	5.7	5.2	5.3	4.3	0.2
해양수산 레저관광	7.7	8.6	8.4	9.2	9.0	8.4	0.7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12.3	11.7	11.4	11.0	10.5	10.1	-2.2
해양수산 전체	3.7	3.7	3.7	4.1	4.1	4.0	0.3
전산업	6.8	6.4	6.4	6.4	6.4	6.4	-0.4

자료: 2010-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용, 해양수산업 중심으로 저자 분석

해양수산업 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과제

■ 부가가치율과 취업계수가 높은 해양수산 성장 Key Sector인 수산물 유통, 항만, 해양수산 레저·관광,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에 주목

- 수산물 유통, 항만, 해양수산 레저관광,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등 4개 부문의 경우 동일 금액을 투자할 경우에 타 산업보다 부가가치와 고용 측면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정책의 효과성이 높고,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인 만큼 성장전략 마련이 시급한 부문임

■ 성장률이 높은 수산물 유통, 해양자원개발 및 건설 부문에 기대

- 수산물 유통은 산출·부가가치·취업자수 측면에서 모두 고성장 추세를 보였음.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 유통의 부가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양자원개발 및 건설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 문제 등과 같은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의 잠재력에 집중하는 해양신산업(해양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R&D 투자, 기술·인프라·인력 확충을 통한 성장 가능성 확대가 필요함

■ 해운조선 업계의 상생 협력 전략과 정부차원의 산업정책 거버넌스 구축 시급

- 전체 해양수산업 대비 조선업과 해운업의 산출, 부가가치,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2.5%, 38.1%, 29.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이들 산업은 대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이므로 외부 경제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우리나라 전체 해양수산업의 경제 규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증대에 따른 운송수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선박 공급 부분의 기술적 혁신의 기회가 넓어지고 있음.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독자적인 생존/성장 전략과 함께 협력(alliance)을 통한 시너지 창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R&D 지원, 금융법률 등 연관 서비스업 연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산업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며, 특히 산업정책의 거버넌스 구축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긴요함
- 보다 구체적으로, 2019년 5월 21일 개정된 해운법 시행령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속히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운 산업정책 거버넌스를 가동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운산업 진단센터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전략 및 정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수산자원관리 강화 및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노력 필요

- 최근 수산물 생산업은 총산출이 정체되는 가운데 부가가치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 생산의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양식어업 생산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나, 국민 식생활에서 중요한 어패류 생산은 정체되고, 부가가치가 낮은 전복 양식장의 먹이용 해조류(미역, 다시마) 생산이 크게 늘었음. 또한 생산자 수취가격(어획물 가격)은 추세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유류비, 선원임금 등 출어경비 상승으로 인한 중간투입 비중이 확대된 것도 부가가치율 감소에 영향을 미침
- 수산물 생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산자원관리 강화 및 실효성 확보, 산지단계에서부터 어획물의 상품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산·유통구조 확립, 고부가가치 어패류 양식생산 확대 등에 정책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이 선호하는 수산가공식품 개발, 수출상품화로 성장기반 마련 필요

- 수산물 가공업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식품소비의 다양화, 간편화, 고급화, 건강·안전 지향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선호도가 높은 수산가공식품 연구·개발, 수출 상품화가 중요한 성장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수산부문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제약이 큰 수산물 생산업의 확장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원료 수산물을 이용하여 더 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산물 가공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해양바이오 소재나 반려동물 사료와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군의 중간재 활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18~22)」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산업기반의 고도화 시급

- 현재 산지-도매-소매단계의 수산물 유통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하고 노후화되어 있으며, 원물중심의 저부가가치 유통, 경영체의 영세성 등으로 유통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수산식품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업계의 자율적 대응만으로는 품질·위생관리 기반의 고도화가 어려운 실정임
- 해양수산부는 2018년 6월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18~22)」을 수립·발표하였음. 이 로드맵에는 산지와 소비지의 수산물 위생 개선, 저온유통체계 개선, 수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수산물 유통산업 도약기반 마련 등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가 제시되어 있음. 이 실천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물의 위생·품질 제고,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해야함

■ 해양수산 레저·관광업은 해양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부가가치율과 취업계수가 높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부문

- 관광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음식 및 숙박 서비스 부문이 제외됨에 따라 해양수산 레저·관광의 규모가 과소평가됨. 이에 따라 해양수산 레저·관광의 공급측면과 소비측면의 경제규모를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류체계 및 측정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수요 증대로 해양수산 레저·관광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며, 여가 트렌드와 해양수산 레저수요 변화를 고려한 성장전략 마련이 필요함

■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은 일자리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부문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부문

-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은 취업계수가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산출액 증가시 고용증대효과가 큰 산업이며, 부가가치 중 임금의 비중이 높아 산업 규모 증가시 임금 소득 증가로 인해 소비 증가 등의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됨
- 또한 해양수산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율이 60.3%로 해양수산업 전체에서 가장 부가가치율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부문임
- 고부가가치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함¹²⁾

12) 해양수산 관련서비스업의 세부 구성은 공공행정(32.4%),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29.0%), 해양수산 교육서비스(19.7%)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2015년 기준)

■ 합리적인 해양수산업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해양수산 위성계정 작성 필요

- 산업연관표는 산업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2~4년 정도 자료의 시차가 존재함. 정시성을 갖춘 해양수산업 규모에 대한 장기 시계열 자료가 부재해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한 산업 정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임
- 국민계정자료와 연계하여 자료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해양수산업 부문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급측면, 소비측면, 소득측면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해양수산 위성계정 구축이 필요함
- 위성계정은 국민계정에서 식별이 어려운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계정으로 관광위성계정, 환경경제계정, 보건계정, 가계생산 위성계정 등이 있음
- 해양수산 위성계정 체계를 마련하여 해양수산업의 경제적 위상과 정책효과를 면밀히 진단하고, 지속적인 시계열 모니터링으로 중장기 산업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듦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업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업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업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업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업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업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업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업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업,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업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업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업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हित감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업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 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업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벙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업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업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제120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2019.05.29.
제121호	마-중 무역전쟁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2019.06.13.
제122호	서핑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2019.06.13.
제123호	어업작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시급 -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2019.06.18.
제124호	유조선 파격이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19.06.28.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2019.07.03.
제126호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업 분야 시사점	2019.07.16.
제127호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증 지정 유지에 따른 양식업계 대응 방향	2019.07.17.
제128호	섬 가치 제고, 접근성 개선과 고유자원 관리가 관건 - KMI 국민 섬 인식조사 결과 -	2019.07.17.
제129호	해양공간기본계획 7월 말 시행 - 지역사회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	2019.08.01.
제130호	항만도시 고용창출을 위한 항만배후지역 풀필먼트센터 구축 시급	2019.08.02.
제131호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가입 의미와 향후과제	2019.08.02.
제132호	일본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전략과 시사점	2019.08.05.

URL: <https://www.kmi.re.kr/>